

우파 야당이 “원조부패당”이었다면 중도 여당은 “부패신장개업당”인가?

관련 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장계 시도

2~3면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3면

가짜 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코로나19·브렉시트 위기에서
살아남을까?

8면

미국
마르크스주의자가
보는 미국 대선

6~7면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택배사가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12면

국제
태국 반독재 투쟁 8면
볼리비아 대선 7면
프랑스 테러 7면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김승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 부패를 청산하겠다고며 등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 또한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출신 여당 대표, 친민주당 유명 인사들이 금융 사기, 자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등 청와대 핵심부(어쩌면 문재인까지)가 관여했을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산 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도 있다.

모두 대중을 속이고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특권을 누리거나 권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 사회의 권력자들은 법질서를 엄중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면 서 자신만은 예외가 되려 한다. 노동자·대중이 법질서 바깥에서 파업하거나 시위할 때가 대표적이다.

도inken개인 지배자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본이나 정당이 룰을 어길 때만 위선적으로 난리법석을 떠다(물론 무차별 폭로전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다 싶을 때는 공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공정”에 대한 바람이 크다. 경쟁의 규칙(주로 법)을 다 함께 잘 지켜서 부정부패를 줄이면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는 기대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질서와 규칙 자체에 계급이라는 근본적인 불평등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단지 운 좋게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극소수가 평생 뽀빠지게 노동하는 대다수의 몫을 통제하고, 생산을 통제하는 덕분에 사회 전체를 통제할 힘도 가진다.

계급은 대물림되고, 청년들은 계급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을 시작한다. 그런 경쟁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보도된 은행권 취업 특혜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도 불평등한 메커니즘을 잘 보여 준다. 그렇게 부와 권력, 그리고 확신을 얻은 지배자들(차세대 지배계급인 그 자녀들을 포함해)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대범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더한층 큰 부와 권력을 얻는다.

학교와 주류 언론에서는 노력에 따른 보상, 능력에 따른 보상 따위를 설파하고 추켜 세우며 이러한 필연적인 불평등 메커니즘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대중을 기만해서 소수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게 부패라면,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부패 체제다. 서구 국가들의 합법적 로비 현황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지 않고 뭐 하는가?

국가의 외양은 계급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모든 국민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구조적으로 자본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활발하게 축적돼서 이윤을 생산하고, 노동자에게 세금을 내고 생산된 물건을 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수입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는 언제나 자본가들의 선호와 시장의 신호에 귀를 쫓긋 세운다.

국가는 어떤 규제가 투자를 방해한다고 자본가들이 불평하면 최대한 제거해 주고, 필요하다면 세금 감면이나 재정 지원 등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 특정 산업을 지원해 준다.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가 2차전지 사업 중점 추진 발표로 수혜를 입은 것도 그런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자 제한 인원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해 줬고, 사모펀드 자본가들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 상호 의존이 바탕이 돼서 인적 연결망도 형성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훨씬 더 결정적 힘을 가진 부분은 선출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체로 수십 년간 비슷한 지위를 지키는 정부 부처·검찰·경찰·군대·사법부 등의 고위 관료들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사회가 여전하다

이 그렇다.

그들은 수많은 연줄과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자본가들과 연결돼 있고 그만큼 부정부패에도 찌들어 있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은 모두 엄격한 상명하복 구조여서 그 틀 안에서는 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서 부패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거의 없다.

국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 정책을 끊임없이 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겨 보려는 개별 자본가들의 경

쟁적 로비와 뇌물이 끊임없이 국가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가는 부정 부패의 감시자이긴커녕 그것의 본산이 된다.

그래서 국가 운영권을 선거로 접수해서 자본주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부패를 근절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개혁주의의 목표는 공상적이다. 부패를 근절하고 싶다면 자본주의와 국가에 근본으로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올해 8월 11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영상의 노출 장면과 수업 중 몇몇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치를 19일에 또다시 내렸다(이 처분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직권으로 취소했음이 21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한 직위해제로 곤장 고초를 겪은 배이상헌 교사의 고통을 보상하느니, 교단 복귀를 앞둔 교사의 평범한 일상을 또다시 앗아간 것이다.

그 사유도 독단적이고 고압적이기 짝이 없다. 배이상헌 교사가 “복종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돼 “학교에서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성비위 여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복종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 자체가 부당했는데, 이제는 아예 수사 결과마저 가만히 무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답정너’ 식 결정을 내릴 거라면 대체 왜 13개월 동안이나 배이상헌 교사를 괴롭혔는가?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서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성비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이나 영상자료를 문제삼았다. 게다가 배이상헌 교사가 SNS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쓴 소명 글들을 “2차가해”라며 징계 사유로 추가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광주전남여연), 전교조 여성위 등도 같은 논리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를 압박해 왔다. 광주전남여연은 10월 15일자 성명에서 배이상헌 교사와 지지도임에게 “2차가해를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는 ‘H중학교[배이상헌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 학생자치회 입장문’을 성명서 뒤에 첨부하기까지 했다.

이 입장문은 배이상헌 교사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발언들(‘여자를 꼬시다가 안 되면 강간해버려라’ 등)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적시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지도임을 즉시 해체하라는니, 배이상헌 교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를 내리라는니 등의 도를 넘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는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많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했던 성인지교육용 영상이다. 신고된 일부 발언들도 그 진의가 곡해됐거나 교사가 하지 않은 말

이었다. 교사의 일부 발언에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성비위’라고 할 수 없음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재차 입증됐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교육청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소명하려는 노력 일체와 교육청 방침에 대한 정치적 비판조차 “2차가해”로 몰며 배이상헌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 수사의뢰와 직위해제의 명분이었던 성비위 혐의가 결국 실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청의 오류를 덮기 위해 여성단체들과 몇몇 학생을 내세워 “2차가해”로 쟁점을 슬그머니 옮기고 있다.

그러나 배이상헌 교사는 어떠한 소명기회조차 없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쫓겨났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배이상헌 교사를 파렴치한 성비위범으로 공공연히 낙인찍었다. 광주지역 여성단체 등도 공개 성명을 통해 여기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배이상헌 교사는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만 했다. 이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자기 방어 활동이다. 이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억압적인 재갈 물리기일 뿐이다.

오히려 배이상헌 교사와 지지도임이 부당한 교육청의 매뉴얼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그 역효과에 문제제기한 것은 성평등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학생의 신고만으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교사를 교단에서 내쫓고, 교사의 수업을 수사기관의 검열에 맡기고,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나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려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장휘국 교육감은 정작 본인의 금품수수, 친인척 인사 부조리, 불법 선거 등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서, 광주의 많은 진보적 단체들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도대체 장휘국 교육감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

옹게도, 배이상헌 교사는 중징계 방침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3면으로 이어짐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김문성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우파 야당과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권은 새 폭로를 활용해 사태를 반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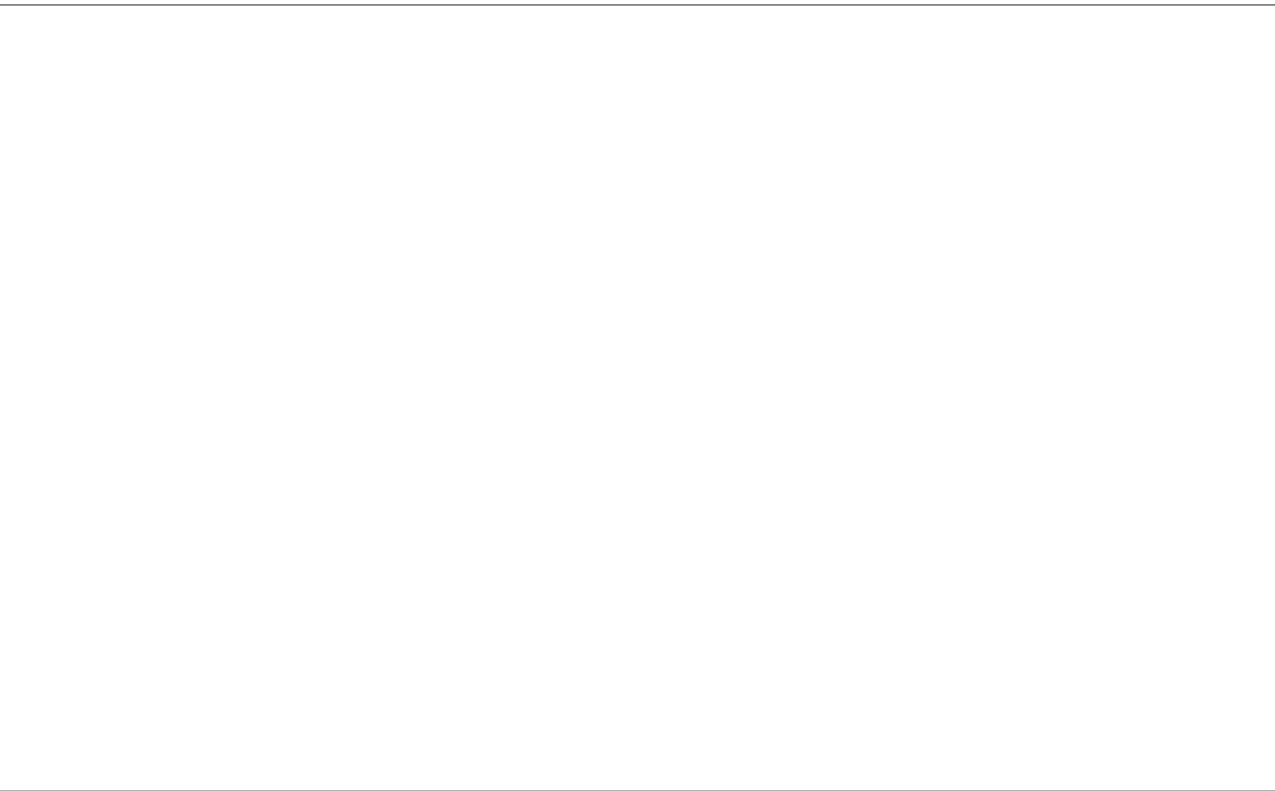
이번에도 라임 사건 몸통으로 구속돼 있는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말이 발단이 됐다. 김봉현은 라임의 정치권 로비스트 구실을 하다가 구속된 이강세(전 광주MBC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청와대 정부수석 강기정에게 뇌물인 현금 5000만 원 전달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0월 16일 <서울신문>은 뇌물 로비 대상에 야당과 검사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김봉현의 옥중 편지(9월 21일 작성)를 단독 보도했다. 이 편지에는 검사 측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뇌물 로비 리스트에 강기정 정도는 나와야 한다며 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봉현 같은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냐’던 강기정은 이 보도가 나오자 라임 사건이 ‘검찰 게이트’임이 드러났으며 말을 바꿨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광석화처럼 김봉현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여권 측에 불리한 김봉현의 법정 진술은 모른 채하더니 말이다. 그 직전까지 추미애는 집 앞에 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라임·옵티머스 건 수사 강화 여론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추미애는 10월 19일 우파 야당과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시한 수사 대상에



검찰 개혁? 문재인과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역겨운 위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는 윤석열의 처에 관한 의혹도 포함됐다. 다음 날 청와대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지지했다. 창피를 줘서 검찰총장직을 자진 사퇴하도록 여권 전체가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음 날 윤석열이 해당 건들의 수사에 이미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순순히 수사지휘권을 수용하자, 21일 아침 추미애는 ‘언론은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며 다시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이 친여 성향의 검사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집권당 부패 의혹은 불거졌다. 여권의 온갖 무리수가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막을 수 없었듯이 부패 폭로 또한 막기 어려울 것이다.

라임 사건이 여야와 검찰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 건이 된 지금,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가장 노골적이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특검도 몰타기 용인데, 검찰총장도 못하는 수사를 특검이 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역대급 뻔뻔함

여권은 라임과 옵티머스 건을 검찰이 조작한 의혹으로 몰고 가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추미애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일환인 양 포장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구속된 재소자(피의자 포함)를 검사가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런 관행은 마땅히 개선돼야 할 폐습이다. 심지어 검사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시설이 더 열악한 검찰청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대기시키다가 조사도 안 하고 돌려보내 골탕을 먹이기도 한다.

그런데 추미애는 10월 21일 이 관행이 악용된 사례로 김봉현을 지목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생계형 목돈까지 날려 버리고 자신은 법망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뇌물을 뿌린 범죄자를 억압적 수사 관행의 피해자로 둔갑시

킨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3번 중 2번을 추미애가 행사했는데, 두 번 모두 해당 금융 사기 사건 주범의 진술에 근거했다(이철, 김봉현 등). 추미애가 법석을 떨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채널A 이동재 기자 건(일명 ‘검·언 유착’ 건)에서는 타깃이었던 한 동훈을 기소하지도 못했다. 추미애 자신도 아들 탈영 무마 특혜 의혹에 자신이 관여된 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었다.

결국 민주당의 ‘검찰 개혁’ 슬로건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부패 의혹을 덮는 용도로 고안된 것으로, 이제 그 슬로건 자체가 역겨운 위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법무부장관이 견제하는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그런 견제조차 없는 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편, 추미애는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자신이 임명한 서울남부지검장 등과도 엮박자를 냈다. 이는 집권세력이 검찰과의 갈등 끝에 주도권을 쥐었지만, 그 우세가 불안정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

상황이 이런데, 정의당은 김봉현의 편지 의혹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냈다. 사안의 본질을 헛짚은 것이다. 조국 사태 때 정부·여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던 실수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발본색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10월 21일 정무수석 최재성과 만난 자리에서 골치 아픈 추미애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은 정의당이 정책만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같은 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윤석열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노동계급의 독립적 이해관계 대변하기를 소홀히 해온 결과로 지배계급 내 갈등에 그 내부

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집권 세력이 연루된 금융 사기극

라임과 옵티머스 건에서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집권 세력의 권력형 부패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라임 건에서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라임의 뒤를 봐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다. 게다가 김봉현이 (편지에서 거론했다는) 황교안의 측근과 친박인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까지 로비를 한 정황을 봤을 때, 현 여권 실력자들에게도 로비를 시도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기동민 등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여당 정치인들의 명단이 나돌았다. 그 명단 중 말석급인 이상호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강기정도 포함됐다는 이 리스트의 출처도 김봉현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런데도 이 명단은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물론 김봉현의 처신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김봉현은 자신의 변호인도 아닌 (겉으로 보기엔 무관한) 소규모 법률사무소에 야당과 수사 검사에게 불리한 편지를 9월에 써 주고는 정작 10월에 열린 공개 법정에서는 그 편지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 형량 거래를 위해 이쪽저쪽에 줄을 댄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옵티머스 건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벌인 펀드 사기로 보인다고 지적하는데,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시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이다. 옵티머스의 전현직 대표가 모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친분(학연)을 과시해 왔다.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어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인물(이진아)은 최근 까지도 (바로 그런 비리를 감찰하는 게 임무인)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의 남편(윤석호)도 공범으로 구속돼 있다.

이 사기 펀드에 공공기관들이 총 1000억 원 넘게 투자했고, 억대의 개인 투자자 중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진영도 있다. 진영과 민주당 의원 김경협은 거래하던 은행에서 관청은 상품이라며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는데, 농협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검증도 안 하고 사기 펀드를 대대적으로 판매한 것도 의혹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옵티머스 건이 다시 불거진 계기는 옵티머스 사기극에 동원된 회사가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전 국무총리이자 현 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여기에 과거 민주당 정부의 핵심 경제 관료였던 이현재, 현 경기지사 이재명 등의 이름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까지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가 이 정도로 폭넓게 연관돼 있다면 여권 내부에 브로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금융 사기 건들에는 손실로 위장해 각종 불법 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나 상속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존재한다(자금 세탁 후 증발 의혹). 이는 단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경쟁,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는 계급적 부패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까지 덮으려는 것이다.

부패는 지배계급의 DNA

부패 스캔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덮치고 있다. 주류 자본주의 정당들,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경제 권력자들과 특혜를 거래하는 관행은 그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층 범죄이다.

민주당이 이재용, 신동빈 등을 풀어주며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금융 투기 자본과 유착한 것은 자본주의 정당이라는 이 당의 근본 성격에서 비롯한다. 부패는 이 본질적 성격의 필연적 파생물이다.

따라서 체제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 부패를 없애겠다고 민주당의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것이 헛된 기대이자 퇴보인 이유이다. 대형 금융 사기극을 가능케 한 금융 규제 완화를 1990년대 후반 이래 역대 정부들이 예외없이 추진한 것도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노무현, 박근혜 정부가 아주 적극적이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 생활에서 국가 개입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정경유착 부패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의 대응 방편으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투자가 부진해지면, 증권과 부동산 분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융 스캔들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 의혹을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잘 축적돼야 권력형 부패 사건을 지배계급의 분열·약화 계기로 만들고 장차 대중 투쟁이 일어날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사는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회임이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충한 것이다.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언 테일러

이 글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짜뉴스가 부상한 배경을 다룬다. 2017년 4월 발표됐고 주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짜 뉴스”(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만든 기사)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가짜뉴스의 세례 … 음모론, 편견, 괴롭힘과 증오 선동이 인터넷 미디어에 넘쳐 난다. … 상당수는 힐러리 클린턴의 신뢰를 깎고 그녀의 경쟁자(도널드 트럼프)를 추켜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널리 알려진 한 가짜뉴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텐버 가디언〉이라는 언론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으로 클린턴을 조사하던 FBI 요원이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한다. 전임 대통령 오바마는 이를 두고 “난센스의 모래 폭풍”이라고 했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거나 클린턴이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에 무기를 팔았다 등의 가짜뉴스도 있다.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인 〈버즈피드〉는 “극도로 당파적인” 페이스북 페이지 6곳의 게시물 2800개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수백만 명이 극도로 당파적인 정치 페이지와 웹사

이트들을 팔로우하고 그곳에서 가짜뉴스나 진실을 오토하는 뉴스를 얻는다.” [세계적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는 페이스북이 “미국인 절반 이상이 뉴스를 접하는 창구”가 됐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미심쩍은 승리를 거두자 (총득표에서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뒤졌다) 어쩌면 가짜뉴스 같은 요인들이 결정적이었을 수 있다고 여겨졌다.

페이스북 사장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문제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만 수세에 몰리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을 정밀 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올까 봐 우려하는 듯하다”고 썼다. 유럽연합은 페이스북에게 “가짜뉴스”를 더 엄격하게 다루라고 촉구했고, 독일 정부는 가짜뉴스 전파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자고 제안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모럴 패닉 [1] 양상마저 띤다. 애플 사장 팀 쿡은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정신을 죽여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가짜뉴스를 “질병”이자 “배변성애” 비슷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OECD는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을 교육 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여기에 뛰어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면 아무데나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서(“CNN, 아주 가짜뉴스다. BBC

도 만만찮다”) 논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이 난장판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순 없지만 가짜뉴스가 새롭지 않다는 점을 짚는 것은 중요하다. ‘낯시성’ 제목에다가 그것과 전혀 관련성 없는 “뉴스”들을 모아 놓은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더 의미심장한 사례로 2003년에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한 것을 생각해 보라. 언론들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대대적으로 반복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 동상이 대중적 환호 속에서 끌어내려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보도됐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가 취임식에 오지도 않았던 대규모 환영 군중을 운운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쪽짜리” 진실들

이런 일들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1946년 영국 노동당 법무장관은 “신문 소유주들이 … 사실을 왜곡하고 뉴스를 은폐한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1년 보수당 총리 스탠리 볼드윈은 언론 재벌들인 비버브룩(〈데일리 익스프레스〉)과 로서미어(〈데일리 메일〉)를 “프로파간다 기술자들”이라고 묘사했다. 볼드윈의 말은 마치 요즘에 한 말 같다. “노골적인 거짓말, 그릇

된 설명, 반쪽짜리 진실들, 발언자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짓누르는 게 그들의 방식이다.”

뉴스는 상품이고 명품을 베낀 “짝퉁” 같은 가짜 상품들도 “진품” 못지 않게 자본주의적 산물이다. 즉, 이런 것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다른 생산자와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다. 가짜뉴스는 인터넷 광고로 수익을 낸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도 이윤 때문에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뉴스”는 이윤 창출 이상의 구실을 한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같은 자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타임〉처럼 사업상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언론은 더 광범한 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마르크스는 당시 언론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음에도 이 점을 포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시대에서 지배적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뉴스”는 체제를 정당화하고 이윤과 경쟁,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와 기구들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

노엄 촘스키와 에드워드 허먼의 책 〈만들어진 동의〉[국역: 《여론조작 —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는 현대 언론의 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더 광범한 사회의 제도적 구조물과 일체감을 갖도록 만드는 가치관, 신념, 행동

양식들로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 지금의 세계는 부가 집중돼 있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하기 때문에 … 체계적인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스”는 언뜻 보기에 프로파간다처럼 보이지 않으며 “언론은 서로 경쟁하고 주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비리를 폭로 · 공격하면서 사상의 자유 대변인을 자임한다.” 이런 일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언론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뉴스 거리를 선택하고 해석한다고 믿는다.”

가짜뉴스란 이런 언론계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프로파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부상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요인은 신문 산업의 위기다. 영국에서는 2005~2015년 사이 신문 산업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전국적 신문 7곳이 지난해에만 발행부수를 10퍼센트 이상 줄였다. 광고 지출은 늘고 있지만 그 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간다. 이들은 세계 온라인 광고 산업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에 80퍼센트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요인은 주류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지만 이라크 전쟁과 그 실패, 2008~2009년의 경제 위기(금융 추락, 은행 구제, 경기 후퇴, 지배 엘리트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긴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발된 각종 거짓말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현 상태와 처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셋째 요인은 1990년대 중엽에 빌 클린턴 정부가 인터넷을 시장에 넘겨준 데 있다. 그 결과, 고배 풀린 자본주의가 신생 IT 기술과 결합했다. SNS, 알고리즘, 자동화 시스템(매크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각종 온라인 광고 기법의 발달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한 사례를 들자면, 미국 대선 관련 트윗의 5분의 1은 경합주에 사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겨냥한 매크로로 생성된 것들이었다.

억만장자들

넷째 요인은 미국에서 억만장자들과 기타 엘리트들이 화석연료 대부호인 코크 형제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성한 것이다. 제인 메이어 기자는 책 《다크 머니》(국역:《다크 머니 — 자본은 어떻게 정치를 장악하는가》)에서 “미국의 가장 으리으리한 갑부, 우익 언론 거물, 보수적 정치인, 작가, 광고업자들”과 동맹을 맺은 헤지펀드, 주류·석유·석탄 억만장자 집단의 탄생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라는 공통점 외에도 연방정부의 구실을 축소하고, 월스트리트 규제에 반대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을 약화시키고, 오바마케어를 없애야 한다는 신념으로 뭉쳐 있다. 트럼프가 당선한 해에 코크 형제는 이런 목표를 내걸고 8억 8900만 달러(1조 원)를 모았다고 메이어는 전한다. 이 집단의 구성원 중에는 헤지펀드와 프로그램 주식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루퍼트 머서가 있는데 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터넷 “언론” 〈브레이트바트〉에 돈을 낸다. 〈브레이트바트〉는 가짜뉴스 난장판의 심장부에 있는 매체다. 머서는 개인으로서 트럼프에게 가장 돈을 많이 낸 인물이기도 했다.

〈브레이트바트〉의 운영자 스티브 배넌은 전직 해군 장교이자 투자은행 출신으로, 머서를 〈브레이트바트〉에 기용했고 머서는 다시 배넌을 트럼프 선본으로 끌어들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를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배넌은 이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내고 있다. [배넌은 2017년 8월 백악관을 떠났다.]

〈브레이트바트〉가 순전히 가짜뉴스만 보도한다고 봐선 안 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브레이트바트〉가 운영한 블로그 “큰 정부”는 민주당 의원 앤서니 위너(클린턴 측근의 남편)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성들에게 보낸 사실을 가장 먼저 폭로

했다. 그러나 〈브레이트바트〉의 정치와 그들의 운영방식은 뚜렷하다.

2014년에 생긴 〈브레이트바트 런던〉은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라힘 카삼이 운영하고 있다. 1월에 독일 〈브레이트바트〉는 도르트문트에서 이주민 1000명이 아이시스와 알카에다 깃발을 흔들며 경찰을 공격하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새해 그믐날 불꽃놀이 중 [공사 중이던] 인근 교회의 비계에 작은 화재가 난 것이었다. 그 교회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소식은 SNS에서 광범하게 공유된 후 언론에 보도됐다.

SNS

가짜뉴스 시장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다. 페이스북, 구글을 통한 광고, 우파적 편집증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상업적 성공을 노리는 인터넷 “기업가들”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부류의 미국 기업 ‘리버티 얼라이언스’의 경영자 브랜든 발로라니를 취재했다. SNS상의 우익 청중을 겨냥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발로라니는 처음에 “티파티[2] 티셔츠나 칼, ‘낙태 반대, 신을 믿어라, 총기 자유’ 같은 자동차 스티커를 판매하던 처지에서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 176개를 운영하고 5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인물로 변신했다.” 발로라니는 40명이 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고용하고 있고 “그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100여 곳의 접속자 중 60퍼센트”는 페이스북에서 유입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다른 “페이스북 가짜뉴스 제국의 기획자” 폴 호너를 취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계속 공유합니다. 아무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가짜뉴스 웹사이트 〈덴버 가디언〉의 배후 ‘디스인포미디어를 운영하는 저스틴 콜러도 이런 부류다. 이들뿐 아니라 [남유럽 소국] 마케도니아의 벨레스 같은 소도시에는 미국 정치 웹사이트가 100개 이상 [서류상] 본부를 두고 있다.〈파이낸셜 타임스〉

다행히도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유용한 연구들도 있다. 미국의 《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일 사이에 공개된 기사 125만 개를 조사하고, 〈브레이트바트〉, 〈인포워즈〉[‘정보전쟁’], 〈트루스피드〉[‘진실의 창구’], 〈엔딩더페드〉[‘연준 죽이기’] 같은 웹사이트들을 살펴본 뒤 그 기사들을 둘러싼 하이퍼링크와 SNS 패턴을 연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우익 언론 네트워크는 〈브레이트바트〉를 중심으로 외부와 단절된 독자적인 언론 체제를 구축했고 SNS를 극도로 당파적인 관점을 퍼뜨리는 중추로 삼고 있다. 이들 친트럼프 미디어의 권역은 더 광범한 언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광범한 언론은 우파 미디어



트럼프의 부상은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계기의 하나였다

권역이 선정한 정점, 즉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반대 언론의 정합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격도 중심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파 언론들은 트럼프의 경선 경쟁자들과 머독의 우익 TV 방송국 〈폭스뉴스〉를 공격했다. 〈브레이트바트〉의 다음 기사 제목 2개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선 경쟁자’ 루비오와 결탁해서 불법 외국인들을 사면제한 폭스뉴스,’ ‘트럼프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따르는 무슬림 옹호자를 구글과 폭스TV가 다음번 공화당 TV 토론회에 부르기로 하다.’

“이런 소식을 가짜뉴스라고 기각해선 안 된다. 이들의 힘은 익숙하게 반복되는 거짓말, 편집증적인 논리, 일관된 정치적 방향과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결합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역(逆)정보[3]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스탠퍼드 경제정책 연구소의 경제학자 메튜 겐츠크우와 뉴욕대의 헌트 앨컷은 소셜미디어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작은 구실”만을 했고 가짜뉴스의 구실은 더 작았다고 말한다. 이들은 SNS를 통한 뉴스 웹사이트 방문과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뉴스를 연구했다. 선거 후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뉴스”를 보여 줬는데 일부는 진짜 뉴스, 일부는 선거 기간 동안 유포된 가짜뉴스, 또 일부는 설문을 위해 만든 유포된 적 없는 가짜뉴스였다. 15퍼센트만이 자신이 본 가짜뉴스를 기억해 냈고, 7.9퍼센트만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다. 유포된 적이 없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기억이 난다는 응답자는 14퍼센트였고 그것을 믿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8.3퍼센트였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

렸다. “가장 널리 퍼진 가짜뉴스들도 미국인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만이 봤고 그들 가운데 절반만이 이를 믿었다.”

역정보

영국 설문조사 단체 유고브는 영국 공영방송국 〈채널4〉의 의뢰로 “사실을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역정보”의 영향력을 조사했다. 성인 1684명을 상대로 기사 6개를 보여 줬는데 그중 셋은 가짜였다. 가짜뉴스의 헤드라인은 ‘경제 성장 위해 이주민들에게 8500파운드 [1300만 원] 지원,’ ‘트럼프, 출국 희망자에게 아프리카나·멕시코 편도 티켓 제공하기로’ 같은 것들이었다. 가짜뉴스를 모두 찾아낸 이들은 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가짜뉴스를 우려했고, 3분의 2는 SNS가 가짜뉴스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46퍼센트 (18~24세 연령대에서는 더 높은 69퍼센트)는 사실 검증 웹사이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는 트럼프가 올라탄 포퓰리즘 물결과 잘 어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물결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가짜뉴스를 둘러싼 위선과 근시안적 태도를 지적하고, 가짜뉴스가 지배계급에게 안기는 문제(비록 일부 엘리트들은 나름의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이용하지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짜뉴스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는 독성이 있다. 증오를 퍼뜨리려 하는 자들이 애용하는 수단이고 체제에 도전하는 이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모든 “뉴스”가 프로파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히틀러의 선전부 장관 괴벨스와 영국의 자유주의 신문 〈가디언〉 사이

에는 만리장성만큼의 차이가 있다.

언론의 모순적 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없다. 그들은 착취와 차별에 기초한 이 체제의 실상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계가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폭로가 나오기도 한다. 루퍼트 머독의 신문(〈뉴스 오브더월드〉)이 불법 도청을 하고 경찰과 공모한 일이 폭로된 것이나, 조세 회피처를 폭로한 파나마페이퍼, 국회의원들의 세비 스캔들 폭로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폭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70년대 초에는 미국 대통령 닉슨을 끌어내린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있었고, 1968년 베트남 미라이 학살에 대한 폭로는 반전 운동을 부채질했다. 이런 사례들은 주류 언론의 한계 안에서도 끈질긴 저널리즘이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 “부정직한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그의 사업과 정권에 대한 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검증 능력은 트럼프 몰락에서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더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수록 내부 폭로와 양심선언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탐사보도 저널리즘이 활동할 여지도 더 커질 것이며 그만큼 트럼프의 몰락도 앞당겨질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23호 / 번역 김중환

- 특정한 행동이나 소수의 사람들 탓에 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과장되게 선동하며 공포심을 광범하게 부추기는 것.
- 공화당 내 강경 우파 조류로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 오바마케어 반대,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한다. 일부 대자본의 후원하에 2009년 부상했다.
- 독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에서 살포되는 거짓이나 부정확한 정보, 고의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보’와는 구별된다.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2020 미국 대선, 무엇이 쟁점이고 이후 전망은 무엇인가?

크리스 리드 미국 반자본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활동가

크리스 리드는 조 바이든의 대선 선거 운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11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맥락 속에서 본 2020년

이 글을 쓰는 현재 [미국 시각으로 10월 12일]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는다. 타격이 가장 컸던 주(州)들을 포함해 많은 주들이 확진자 증가세에도 경제 활동 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경기가 급락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연방정부는 재난지원금 액수가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 때 지급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미 그 자체도 불충분했는데 말이다.(노동자들에게는 확실히 그랬다. 지배계급은 톡톡히 덕을 봤지만 말이다.)

범죄적이라 할 만큼 엉터리였던 팬데믹 대책 때문에 경제가 노동계급에게 더 불리하게 변화했다. 여기서 원래 대로 돌아가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릴 듯하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주정부들은 무능하고, 연방정부는 노동계급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월가(街)에 수십억 달러를 퍼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적인 그 운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비극을 경감하거나 막는 데 필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염병 대유행에 더해, 체계적 인종 차별의 잔혹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도시에서 거리로 나와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살해에 항의해 왔다. 최근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일어난 제이컵 블레이크 피격 사건으로, 경찰은 경찰 개혁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점을 또다시 스스로 입증했다.

2020년에 일어난 다른 많은 일들처럼, 이번 대선도 미래 세대에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들게 하는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다.

좌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버니 샌더스가 기득권층의 단호한 저항을 넘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민주당을 이용한 선거 정치가 사회 변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얼마쯤 품었다. 버니 샌더스가 패배한 후 찾아온 실망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더 넓게는 선거 정치에서 좌파의 구실이 무엇인가에 관한 오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런 질문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겠지만, 지배계급과 정부 운영자들은 [좌파의] 도전에 응할 생각이 없으니, 계급투쟁을 전진시킬 필요만 더해지고 있다. 선거 정치의 변증법에 따라, 한편에서는 자유주

의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좌파적·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악 대 최악의 양자택일로 정치적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는 “실용적인” 접근법에 따라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요구도 커진다.

새로운 선거, 똑같은 논쟁

물론, 이는 새로운 것 없는 일이다. 미국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가 차악론에 관해 1968년 대선 때 제시한 분석은 그후 모든 선거에도기가 막히게 유효하다. 그럼에도 1968년과 2020년 사이의 유사성은 특별히 두드러진다.

지금 트럼프처럼 당시 닉슨도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는 해묵은 인종 갈등을 무기로 삼은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 부통령 휴버트 험프리는 그다지 영감을 주는 인물이 못 났는데, 특히 베트남 전쟁을 한결같이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험프리는 민주당 기득권층의 지지 덕에 예비경선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지금 바이든처럼 당시 험프리의 대선 선거운동에서도 이전 민주당 정권의 연속성이 대체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차이가 있다. 1968년 닉슨의 대선 승리로 닉슨 시대는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가 아직 지배계급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닉슨의 통치 때문에 양당 모두가 당시 위기에 대응해 “관료적 국가화”(드레이퍼는 “국가 개입으로 위로부터의 경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압력을 받았다. 그 때문에 닉슨은 환경보호청과 산업 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했다. 오늘날 공화당 대통령으로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자유주의 동학은 판을 완전히 바꿔 놔다.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국내 치적인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케어’는 거대 민간 보험사들을 배불라는 정책이었고, 오바마는 이민 개혁 약속을 했음에도 이전 그 어느 정권보다 이민자들을 더 많이 추방했다. 레이건 정부 이래 시장적 해법 추구는 공화·민주 양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심지어 시장 자체와 이윤에 대한 근시안적 집착이 많은 문제의 원인일 때조차 그랬다. 오바마케어가 바로 그런 사례다.

바이든의 출마와 [그가 당선하면 시작될] 미래의 바이든 정부도 이런 맥락



미국 정치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돼 온 ‘차악론’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에서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부상이 이번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이 몇 년에 걸쳐 축적된, 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임을 이해하는 듯한 사람들조차 만만찮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사람들마저, 실속 없고 진실을 왜곡하는 중도주의 정치의 화신이라 할 만한 자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그 중도주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바이든은 1973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줄곧 핵심

적 구실을 했다. 오랫동안 바이든은 대량 투옥, 기후 변화, 이주민, 제국주의, 복지 “개혁”, 평등권, 낙태권 등에서 잘못된 편에 섰다. 그의 행보는 가혹이나 부정의한 기존 상황을 고수하고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했으며, 그런 점에서 바이든에 필적하는 전국적 정치인은 없다시피 하다.

그러므로 바이든이 당선해도, 트럼프가 지난 몇 년간 더럽혀 온 “미국의 정신”이라는 허울을 다시 세우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턱 없는 생각이다. 바이든 식 정치의 핵심에 있는 깊은 모순은 미국과 세계를 지금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이 크다. 게다가

바이든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기꺼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현재 위기에 대처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려면 본인의 정치적 업적 전부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서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적 기존 상태를 더 완강히 밀어붙이고 있으며, 진보와의 협력보다는 우파의 환심을 사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전범[콜린 파월]이 신예 민주사회주의자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보다 발언 시간을 훨씬 길게 얻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는 겨우 60초만 주어졌을 뿐이다.(그녀

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 중 어느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앞으로도 월가·실리콘밸리·교외 지역의 온건파들에 충실할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듯 말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에 공석을 남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이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재앙은 가뜰이나 《환상특급》 수준으로 기묘하던 2020년 상황이 더한층 기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언론을 장식하는 이런 대형 뉴스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근본적 역학, 또 그보다 중요한 사회 나머지 부분의 근본적 역학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위기 해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리라 여기고는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하려 분투하고 있다.

좌파의 구실

이번에도 좌파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신의 구실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는, 우울할 정도로 익숙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서 바이든이 형편없고 부적절한 후보인 이유를 들었지만 이런 얘기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질문 앞에서 별 소용이 없다. “이번 선거는 그냥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에게 승산이 있다면, 트럼프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바이든이 아무리 나빠도 트럼프와 똑같지는 않다. 바이든이 당선하느냐, 트럼프가 4년 더 집권하느냐는 실질적 차이를 낳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밀어붙였고, 포틀랜드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에게 사용한 잔인한 진압 전술을 전국 대도시들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집권은 모든 면에서 정말이지 재앙이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프라우드 보이ς’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2017년에도 파시스트 강파들이 버지니아주(州) 샬러츠빌에서 열린 반파시즘 맞불 시위에 참가한 헤더 헤이어를 살해한 것을 지지했었다. 최근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샬러츠빌에서처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향해 자동차 돌진 공격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파시스트 조직들이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다. 바이든이 당선하더라도 파시즘이 제기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좌파들은 전국에서 공동전선을 건설해 이 위협에 정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개중 몇몇은 의미심장한 변화로 여겨질 것이다. 예컨대 이민자 가족을 [강제 수용소에] 분리 수용하는 트럼프의 잔혹한 정책 같은 것들이 철회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선거 운동으로 기대치를 잡아 보면, 신임 바이든 정부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트럼프 이전의 “정상” 정치로 되돌아가는 정도일 것이다. 바이든이 추진할 가장 대담한 해법조차 벌어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선거 정치를 넘어

그렇다고 선거가 중요하지 않대거나, 좌파가 선거에 관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 참여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 때문에 외려 전국 선거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청중과 접촉할 종

은 기회일 수도 있다. 버니 샌더스는 심지어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단지 비주류로만 치부될 수는 없음을 입증했다.

선거는 한 나라의 계급 의식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기득권층의 지지분한 술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바이든이 수백만 표를 얻었다는 — 대다수가 [샌더스의 주요 공약인]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했음에도 —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샌더스 지지자들의 다수가 기득권층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품고 2016년에 그랬듯 이번에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민주당 기득권층은 샌더스의 공약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든이 더 “현실적인” 후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좌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하지 못했다.

이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웅변한다.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혁명적 메시지와 전술이 필요하다. 이로써 정치적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절실한 노동계급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만이 2020년 세계의 야만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의 부상으로 이어진 근본적 모순에 대처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미래에 훨씬 더 위험한 우익이 권력을 잡는 길을 닦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의 앞에 놓인 과제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봉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 운동은 인종차별 반대 투쟁과 작업장 내 착취 문제를 연결하는 노동계급 연대와 조직의 고무적 사례들을 보여 줬다. 또, 불과 몇 주 만에,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제쳐지던 경찰 재정 삭감 요구는 미국 전역 활동가들의 핵심 요구로 부상했다. 이는 통상적 선거 흐름에 따른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거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 활동[‘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급작스레 폭발한 결과였다. 좌파는 바로 이런 운동에 초점을 뒀야 한다. 여기에 노동계급 권력을 건설할 진정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선거에서 누가 당선할지는 궁극적으로, 인종 정의를 요구하며 국가 탄압에 맞서는 거리 운동이나 팬데믹 하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요구하며 싸우는 작업장 내 운동들의 정치 활동보다 덜 중요하다. 결국, 2020년 대선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은 정치의 가능성과 진정한 목적에 대한 더 큰 문제들을 제기한다. 사회주의 단체들에게 정치란, 기성 정당들과 독립적으로 노동계급 권력을 건설하는 것, 인종차별·파시즘·낙태권 등의 쟁점에서 공동전선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어느 당이나 인물이 집권하든 마찬가지다.

헬 드레이퍼는 1967년에 이렇게 썼다. “자본가 정치인들 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제한된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패배가 온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당과 바이든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해하게끔 분투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막중하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장기적 의미에서 승리는 좌파가 계급 투쟁을 얼마나 전진시킬 수 있을지, 거리와 작업장에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유일한 길을 제시할 운동을 거리와 작업장에서 건설할 수 있을지로 가능될 것이다.

출처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웹사이트
번역 김동욱

볼리비아 대선

쿠데타로 집권한 우파의 패배

소피 스키히어

미국의 지지를 받은 선출되지 않은 우익 정부가 1년 가까이 집권한 후, 볼리비아인들은 쿠데타 정권 퇴진에 투표했다.
10월 19일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랄레스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당(MAS)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50퍼센트 넘게 득표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즈의 MAS 당사 앞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MAS는 예보 모랄레스의 정당이다. 모랄레스는 2006년에 집권한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다.
모랄레스는 2019년에 군부와 경찰이 밀어붙인 우익 쿠데타로 쫓겨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미국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
모랄레스가 집권했던 것은 2000년대 초 원주민 운동의 지지 덕이 컸다.
모랄레스 정부는 원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빈곤을 완화했다. 하지만 14년 임기 동안 모랄레스의 인기는 점차 줄었다. 모랄레스가 농산물 기업 및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점점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못마땅해했다.
미주기구(OAS)*가 모랄레스에 부정선거 누명을 씌우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모랄레스는 재투표를 치르겠다고 했는데도 물러나야 했다.
우익 상원의원 지아니네 아녜스가 다음 대통령을 자처했다(아녜스는 원주민들이 “악마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아녜스를 지지했다.
아녜스 정부가 집권한 약 12개월 동안, MAS 지지자들은 법정에 서야 했다.
올해 초 ‘후먼라이츠워치’는 모랄레스 지지자 “마녀사냥”이 [볼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10월 16일 프랑스에서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된 사건은 끔찍한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이 일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마크롱은 이슬람 “분리주의”를 공격하는 자신의 새 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조항들이 잔뜩 담겨 있다.(관련 기사 본지 338호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파시스트를 뺀 나머지 우파들은 마크롱을 지지했다.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과 그의 정당 국민연합은 마크롱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다. 사회당부터 시작해 장 뤽 멜랑송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에 이르는 대부분의 프랑스 좌파들은 수치스럽게도 인종차별적·반(反)노동계급적인 이 국가와 “거국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무슬림 혐오에 찌든 프랑스 주류 사회는 이번 일을 구조적 인종차별을 강화할 기회라고 봤다.	멜랑송은 체첸 난민 공동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위선이 판을 쳤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도 자유를 옹호한다고 떠든다. 그러나 마크롱은 ‘노란 조끼’ 시위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시위 참가자를 실명케 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자이다.	이번 끔찍한 살해가 무슬림 혐오와 국가 탄압을 키우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무슬림 혐오와 국가 탄압이야말로 이번 일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대중 시위가 벌어져 아녜스에 맞섰다. 8월에는 우익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데스 산맥의 통행로를 폭파했고, 고속도로를 바윗덩이로 틀어막고, 지방도로를 따라 참호를 뚫다. 코차밤바시(市) 청소 노동자들은 “불타는 빗자루”라는 별칭이 붙은 시위를 이끌었다.

선거

이런 시위들 때문에, 쿠데타 주도자들은 선거를 연기할 수는 있었어도, 선거를 아예 치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시위에 나섰던 볼리비아 사람들은 10월 18일 대선 때도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MAS에 대거 투표했다. 그러나 이 선거로 투쟁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우익은 선거 결과에 속이 쓰리겠지만 앞으로도 좌파를 공격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지난주에 볼리비아 우익 쿠데타 정부는, 미국이 비호하는 볼리비아 군대가 53년 전에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를 살해한 일을 자축했다. 아녜스는 게바라의 죽음에서 “볼리비아에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볼리비아인들은 자신들이 우익 쿠데타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여전히 MAS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회 밖 대중 저항만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7호 / 번역 김준효
 영어설명
미주기구(OAS) 냉전 시절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외교 테이블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7호 / 번역 김준효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브렉시트 위기 벗어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취약하고 악독하다.” 약 30년 전 마거릿 대처가 물러난 이래 들어섰던 모든 보수당 정부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현재 보리스 존슨 정부를 가장 적절히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진단을 놀랍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존슨은 브렉시트 난맥상을 이용해 총리가 되고, 보수당에서 친(親)유럽연합파를 도려냈으며, 80석 차로 제1당(과반 의석)이 되지 않았던가.

여느 때였다면 이 정도로 총분했을 지도 모른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 때처럼 경제 기상이도가 온화할 때였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훨씬 혹독하다. 존슨은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첫 번째 난제는 유럽연합과 향후 무역 관계를 협상하는 문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유행이다.

존슨이 두 난제 모두에서 진땀을 빼는 것은 단지 그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무능도 한몫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존슨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모순이 있다. 존슨 정부는 “자유 시장”을



“취약하고 악독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숭배하는 전통적 대처주의와, “주권국으로 돌아가기”(〈파이낸셜 타임스〉가 9월에 낸 한 흥미로운 기사에서 쓴 표현이다) 사이에 갇혀 있다.

보수당 내 유럽연합 탈퇴파들은 대체로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유럽연합이 영국의 세계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보호무역주의 블록이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브리튼” 같은 미사여구들이 나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같은 대체로 성과 없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됐다.

세계경제는 서로 경쟁하고 더 적대적이 되고 있는 세 개의 거대한 무역

블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세 블록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존슨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제조업 보조금 지급’을 고수하려는 것이 한 가지 두드러진 사례이다. 이것은 보아하니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니크 커밍스가 첨단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보수당 정부가 대처주의와 실제로 결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전염병 확산을 늦추고 외출제한령 하에서 노동자와 기

업들을 지원하려면 고도의 국가 통제를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존슨 정부는 그중 무엇 하나 완수하지 못했다.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보수당은 대유행 초기에 녹장을 부렸고, 너무 늦은 외출제한령을 그나마 너무 일찍 풀었고, 현재 2차 확산에도 우물쭈물 갈팡질팡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3단계 규제 조치’*를 시행했지만, 내각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전염병 확산을 저지할 수도 있었을 방역 조치를 앞장서서 반대했다.

존슨은 수낙을 잠재적인 도전자로 여기고 두려워한다. 존슨은 80석 차 과반 의석에 기대지도 못하는 처지다.

존슨은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제안한 “서킷 브레이커”*식 전국적 단기 이동제한령으로 보수당을 단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듯하다. 그러나 보수당 평의원 42명이 방역 조치 강화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존슨의 태만함으로 잉글랜드 북부, 정확히 말하면 한때 “노동당의 붉은 벽”[전통적 표밭]이었다가 지난해 12월 총선 때 존슨으로 돌아섰던 옛 제조업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저술가 린지 헐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붉은 벽’이다. 서쪽의 리버풀에서 동쪽의 뉴캐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지대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북부’를 묶어주는 공통점은, 그리고 이 ‘붉은 벽’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노동 빈곤 지역의 상태이다.”

정부의 무능 때문에 심지어 북부 지역 보수당 의원들과 노동당 소속 그레이터맨체스터주(州) 주지사 앤디 번햄이 손을 잡고 최고 수준 방역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두 위기는 상호작용한다. 심중팔구 존슨은 지금도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싶어할 것이다. 존슨이 10월 16일에 유럽연합에게 “접근법을 근본에서 바꾸라”고 최후통첩을 던진 것은 모두가 예상하던 뻔한 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받는 압력 때문에 존슨은 기동의 여지가 적어졌다. 이 협상은 양측 모두가 기고만장하다가 큰코다치게 될지도 모르는 치킨 게임[서로 양보 없이 극한까지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27호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3단계 규제 조치

위험 단계를 “매우 고위험”, “고위험”, “중위험”으로 나눈 방역 등급을 지역에 따라 매기는 조치. 하지만 가장 높은 “매우 고위험”인 경우에도 술집과 모임(집회)만 금지하지, 대학교·중고등학교·작업장 대부분은 폐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국의 방역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영국의 전염병 확산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조치라고 강력 비판한다.

“서킷 브레이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주식 매매를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중단시키는 제도.

태국 반독재 운동

잇따른 대규모 시위가 왕정을 흔들다

자일스 자이 웡파콘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태국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으로 잠시 망명했다.

지난 며칠 태국에서 군사 독재와 왕정에 맞서 벌어진 대단한 시위들은 이 운동이 얼마나 진전했는지 보여 준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독재 시위가 8월부터 태국을 뒤흔들었다. 9월에는 10만 명 넘게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월 14일은 1973년 군사 독재에 맞선 대중 항쟁이 분출한 지 47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도 당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독재자 뿌라웃 잔오차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

로 행진했다.

시위대는 헌법을 새로 쓰고 왕정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군사 정부는 국왕이 방콕 인근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으니 시위를 취소하라고 위협했다. 강력한 태국 군부는 취약한 왕정을 이용해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해 온 역사가 있다.

시위대는 정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퇴근한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는 더 커졌다.

군사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왕정 지지의 상징인 노란 셔츠를 입히고 도열시켜서 왕실 차량 행렬을 환영하게 했다.

공무원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많은 수가 트럭에 실려 왔고, 진짜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오기도 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했다. 어떤 공무원들은 [왕실 차량을 향해] 반

독재 시위대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왕비의 차량이 시위대를 헤치고 나오게 했다. 시위대는 왕비를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 심지어 가운뎃손가락만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위대는 왕비에게 “내 세금 [좀 작작 써라!]” 하고 외쳤다.

전투성

이 시위는 대학생·청년이 주축인 단체가 조직하고 있다. 중등학교 학생, 특히 여학생들의 전투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번 반독재 운동이 10년 전의 민주주의 운동인 ‘붉은 셔츠’ 운동과 다른 점은 어느 정당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류 야당들은 오히려 운동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현 군사 독재 정권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했다. 2019년에 결국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조차도 반(反)민주적 선거 규칙 하에서 치러졌다.

현 정부가 투표에서 졌는데도 군부는 상원의원들을 지명해 정권을 유지시켰다.

사람들은 국왕 와치랄롱꼰의 행태에 진저리를 내고 분노한다. 국왕은 독일에서 첩들과 인생을 보내고 있다. 국왕은 사치스런 생활을 지속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헌법까지 뜯어고쳤다.

왕을 비판하는 것을 [“국왕모독죄”로 규정하고] 혹독하게 처벌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왕을 규탄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은 수십 년만에 처음이다.

군사 정부는 [10월 14일 시위에 대응

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항쟁 지도자 몇몇을 체포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콕 도심을 메우고 정부에 맞섰다.

시위대는 16일에도 모였다. 이번에는 준군사 조직인 시위 진압 경찰이 나섰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다.

사람들은 대열을 재정비하고 17일에 다시 시위를 벌였다. 군사 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날 시위는 여러 곳에서 열렸다.

이런 전술과 결의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파업 같은 더 전투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쪽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기세를 잃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27호 / 번역 김준호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장호중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며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는 세번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봄 절정기의 세 갑절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일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2차 경기 하강도 예고되고 있다.

지난 봄만큼 사망자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각국 지배자들이 기업주들의 이윤을 우선시해 봉쇄 시기를 미루고 있는 만큼, 올 겨울 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늘고 있다.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 이후에나 실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발원지이기도 한 중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줄고 경제도 회복 신호를 보이자 중국 정부는 의기양양한 모양새다. 9월 8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를 열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봉쇄

정말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진 걸까? 아니면 순전한 거짓말일까?

먼저 공정하게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한 적은 없다. 표창대회에서 상을 받은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도 “단계적인 승리”라며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자신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 한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소비를 진작해 정부 투자 확대에 이끌어 온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백서를 발간하며 “큰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불과 며칠 뒤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지만 말이다. 이번에도 한 달만에 칭다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중국 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줬다.

중국 정부의 악명 높은 언론 통제와 통계 조작 이력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없다던 기간조차 그 발표를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실제로 중국 내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기간에도 중국에서 한국, 대만 등지로 입국한 사람들 중 일부가 입국 당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



서방 지배자들의 무능 덕을 토틈하고 있는 시진핑

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무증상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한국처럼) 의심 환자로 분류해 추적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려면 방역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중국처럼 큰 나라에선 더더욱) 또 한국처럼 해도 감염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주기적으로 집단 감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에 중국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일정 기간 완전히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벌여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베이징에서는 인구의 절반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칭다오에서는 전체 주민 1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해 확진자를 걸러냈다.

권위주의적 강제

이런 방식에도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으로 단기간 내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아무리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막강해도 물리적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감염시킬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해 마스크 사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어느 정도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면 해당 기간에 주민들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검사와 격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이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협조를 이끌어 내는가, 아니면 권위주의적으로 강제하는가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식료품이나 각종 필수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앞서 76일 동안 봉쇄된 우한에서의 경험이 이를 얼핏 보여 준다.

당시 우한에서는 철도와 항공은 물론이고 모든 대중교통과 심지어 승용차 이용도 금지된 바 있다. 집을 나가서 주거 단지 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됐다. 이틀에 한 번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외출해서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공간이 도로 곳곳을 지키며 이를 감시했다. 확진자들은 커플이어도 강제로 분리 수용됐다. 나중에는 일정 규모로 편제된 주민 위원회를 통해 식량을 공급했는데, 쓰레기차에 생닭 수백 마리를 실어왔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문제인 정부도 중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강도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치들(마녀사냥, 손해배상 소송, 집회 금지 등)을 동원해 감염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다. 그러면서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두 나라 정부가 적어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지배자들이 아예 통제 시도를 포기한 데 있다. 이 덕분에 중국과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저널 《랜싯》은 최근 편집자 머리말에서 ‘중국의 코로나 통제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꼽았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 하나로 ‘팡강(方舱) 병원’을 지목했다. 팡강 병원은

우한 봉쇄 초기에 체육관과 전시관 등에 설치된 야전병원 형태의 수용 시설이다.

지난 8월 영국의학저널(BMJ)의 편집자도 이 팡강 병원을 언급하며, 확진자를 더는 집에 머물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한 지역에서의 초기 통계를 인용해, 감염자의 70퍼센트 가까이 집에서 가족에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우한뿐 아니라 대구, 롬바르디아, 뉴욕에서 비슷한 일이 재현된 바 있다.

자가격리

그런데 이는 충격적이게도 아직도 (!)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 보건 당국이 확진자 상당수를 집에 돌려보낸다는 얘기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 당연히 병상은 부족할 테지만, 격리 시설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니 감염 확산이 멈출 리 없다. 애당초 ‘집단 면역’ 운운하며 방역을 게을리한 정부가, 증상도 거의 없는 환자에게 병원이나 수용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하지도 못했을 법하다. 또 격리 시설 마련과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에서는 거꾸로 이런 나라들의 뒤를 쫓아 퇴원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는 집에 머무르게 하자는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는 게 이유다. 방역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운 문제인 정부로서는 귀가 솔깃할 만하다. 실제로 정부는 5~6월 확산 이후 퇴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8~9월 확산 때에는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확진자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다.

요컨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통제는 극도로 권위주의적인 강압 조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근본에서는 시진핑 정부만큼이나 노동계급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서방 지배자들의 실패 덕분에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뿐이다. 한국의 문제인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 점에서 시진핑이 정말로 상을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경쟁자일 것이다.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지배자들이 세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반면, 이들의 정당성이 흔들리며 그 균열을 뚫고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벌어진 반란도 그 일부다.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실패로 끝나면 노동자들의 불만도 계속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추천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원하자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확대조차 돌봄 수요에 턱없이 모자를 뿐 아니라,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이나 겸용교실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재정 투자 계획도 전혀 없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82퍼센트를 시간제로 고용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도 개선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온종일 돌봄교실’을 명목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시간을 연장하려 한다든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더 늘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한 긴급돌봄에서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변경해 유연근무를 강요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교사를 긴급돌봄에 투입하는 등 그야말로 공짜 노동으로 때우는 식이었다.

권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은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돌봄교실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돌봄 시설과 인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돌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공유 시설을 민간에 대부해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등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이 법안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덜고,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저렴한 노동과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때우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교사들의 업무도 전혀 줄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들도 이런 시도를 반대하고, 이런 법안을 폐기하라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이해관계가 다른가?

그런데 여러 교원단체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지도부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일부도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돌봄전담사 등)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다.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업무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런 갈등도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돌봄교실에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가령, 경기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 3000여 명 중 전일제는 300명뿐이고, 나머지 90퍼센트는 4시간제(이마저도 2018년까지는 초단시간제) 고용이다. 이렇게 돌봄전담사 대다수가 시간제이다 보니,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근무시간 내에 다 못 하는 업무의 일부와 돌봄 공백을 교사들이 채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돌봄교실의 관리 책임을 교사가 떠안아야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시행 때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불만이 높았다. 즉, **돌봄전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교사들은 업무 가중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돌봄교실의 관리·운영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교사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의 75퍼센트를 차지하며, 아동 24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 24만 명을 돌봄 학교 밖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돌봄교실의 관리·운영 책임이 지자체로 넘어가도 실제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실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이 ‘국공유 시설을 민간에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돌봄교실이 여전히 학교 안에서 운영될 것임을 보여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업무가 또다시 교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몇몇 마을 교육 사업이 학교 안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교사들에게 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안정적인 전일제 돌봄전담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 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야 하며, 돌봄 전용교실을 확보하는 등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돌봄전담사들은 투쟁에 나서면서 시간제 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와 인력 확충을 통해 돌봄 업무 대한 교사 책임을 없애고,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0월 20일 국회 앞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지자체 이관이 돌봄교실 개선에 더 나은가?

일부에서는 현재 초등 돌봄교실이 교사들의 노동이 보태져 겨우 운영되고 있고 돌봄 환경도 열악하니,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교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을 학교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학교를 벗어나 지역에서 ‘마을 돌봄’을 시행하면 지역의 여러 인프라를 이용해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을 돌봄의 이상과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계획은 매우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현재 마을 돌봄의 대표 사례인 서울 키움센터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의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키움센터는 각 구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민간위탁이고, 일부만 구청 직영이다. 직영으로 운영된다 해도 돌

봄교사를 1년 기간제로 계약하도록 서울시가 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조차 전체의 12퍼센트밖에 안 된다)도 비슷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지자체 직영은 극소수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98퍼센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보육교사의 고용은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는 간접고용 형태이며,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시장화된 어린이집의 실태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돌봄서비스들이 열악한 것은 그 필요가 커지는데도 정부가 최소의 비용만 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 501억 원이나 감액했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도 400억 원 넘게 줄였다. 이런 정부와 여당이 돌봄교실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재정을 더 지원할 리 만무하다.

결국 정부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방안은 재정 부담을 민간위탁 등으로 덜어려는 것일 뿐, 양질의 마을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정책은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을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고, 돌봄의 수익자 부담을 강화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전교조 집행부는 돌봄전담사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외면하면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의 노조 간 협의체를 통해 돌봄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화를 함께 할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이런 태도는 교사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심지어 정부 대책에는 교사의 업무 경감 대책과 겸용교실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 계획도 없다.

전교조 내 좌파 의견 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도 지자체 이관을 지지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반

면 또 다른 좌파 의견 그룹인 ‘교육노동자 현장실천은 조만간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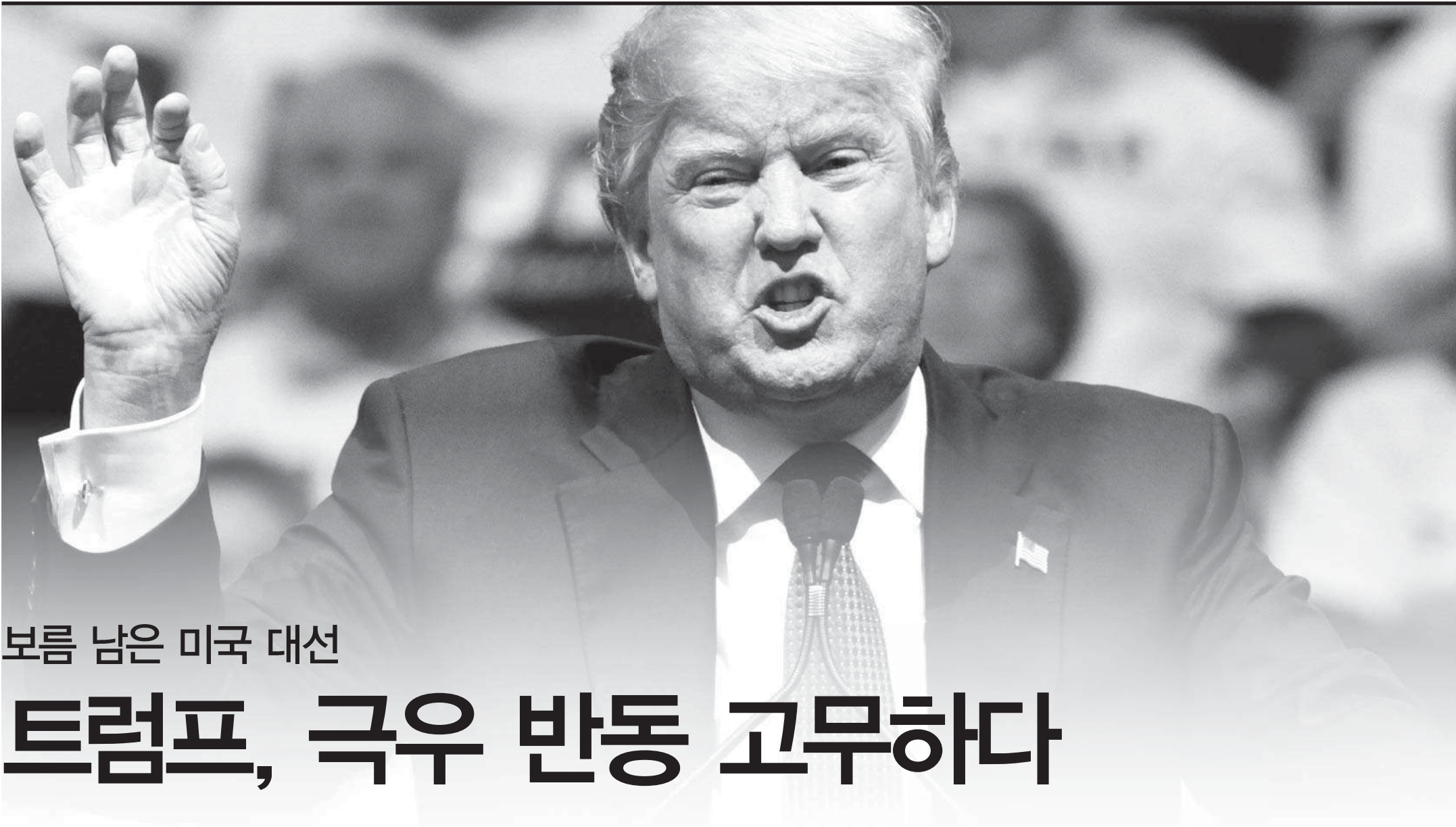
물론 교찾사는 돌봄교실의 “위탁 운영을 반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질 높은 돌봄 전문기관인 지자체로의 이관”을 제시하면서, 당면한 쟁점인 정부의 지자체 이관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며 싸우는 돌봄전담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힘도 사라진다.

아마도 이런 주장들은 전교조 안에서 지자체 이관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절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돌봄전담사들 파업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좌파 활동가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기 십상이다.

전교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나쁜 여론을 탓하며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의 진정한 의도를 폭로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교사들의 이해관계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점, 지자체 이관이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삶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말로만 말고 자신의 노동조합에서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보름 남은 미국 대선

트럼프, 극우 반동 고무하다

김준호

선거를 보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패악이 더한층 기승이다.

10월 16일 열린 ‘타운홀 미팅’ 방식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사회 불안정이 “‘안티파’와 좌파 땃”이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도시들을 불태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전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을 지키려면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좌파를 범죄시해 백인 보수층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로써 보수층을 투표소로 동원해 지지를 격차를 만회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극우의 비호를 더더욱 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위험한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투표소를 감시하라!” 자기가 패하는 경우는 선거가 “조작”될 때문이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에 호응해 극우는 트럼프 반대자들을 겁박해 투표하기 두렵게 만들고 있다.

극우 단체 · 개인들이 ‘트럼프를 위한 군대’라는 모임을 개설해, 곳곳에서 “선거 감시단”을 자처하며 사전 투표소 주변에서 행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를 위한 군대’라는 단체명은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가 “트럼프의 선거 [승리] 지키기 작전을 위한 군대에 모든 신체 건강한 남녀가 자원하라”고 촉구한 것에서 따왔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기관총을 보란듯이 들고 투표소에 출몰하고, 무장한 채 대열을 짓고 주변을 행진하며, 곳곳에서 유색인종 투표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물러서서 일단 대기”하던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극우 단체들이 이런 일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위협적 사태가 빈발하자 몇몇 곳에서는 투표소 약 50미터 안에서는 “선

거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생겼지만, 극우는 그 경계 밖에서 제약 없이 계속 행동하고 있다.

더 위협적인 행동도 벌어졌는데, 10월 19일에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에서 누군가가 (기사를 쓰는 21일 현재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우편 투표함에 불을 질렀다. 선거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반(反)트럼프 투표 자체를 줄이려는 계산에서 자행한 짓일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토안보부(DHS) · 연방수사국(FBI) 등 트럼프 정부 하 공안 기구들조차 “대선을 계기로 국내 [백인]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행위”가 빈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부추기는 위협이 그저 허구가 아님을 반영한다. 실제로 미국인 열에 여섯이 ‘선거 결과를 두고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미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조사 결과, 반면 폭력이 스러질 것이라 답한 사람은 열에 하나 꼴이었다).

1주일 만에 50만 명 확인

한편, 트럼프의 계산에는 핵심 지지층의 높은 투표율로 지지를 격차를 만회한다는 것 외에도, 점차 심해지는 위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가 있다. 10월

중순을 지나며 미국에서는 대유행 물결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 1주일 만에 약 50만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트럼프는 16일에 자신의 방역 정책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중국 말고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그러니 나를 탓하지 마라]” 하고 떠들었다. 트럼프는 19일에도 방역 완화에 반대해 온 국립알레르기 · 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가 “재앙”이라고 으르렁댔다.

그러나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알려진 것만 22만 5000명 넘게 사망한 지금, 트럼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발목이 적잖이 잡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노년층에서 그런 징후가 드러나는데, 10월 18일 현재 65세 이상 층의 트럼프 지지는 바이든 지지에 견줘 약 10퍼센트포인트 낮다. (2016년 대선 출구조사 때는 트럼프가 약 10퍼센트포인트 앞섰던 층이다.) 이들 상당수가 변변한 복지 혜택도 없이 (적잖은 경우 실업이나 준실업 상태인)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경제 위기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본가 주류의 후보가 아니지만, 야당 후보이던 2016년과 달리 지금은 경제 실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현직 대

통령이다.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자처 효과가 지난 대선만 못한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와 경합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말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10월 16일에 바이든은 자신이 당선하면 “전국적 방역 기준”을 만들고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방역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백신을 어떻게 보급할지 등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에도 방역 기준은 있다.) 지금까지도 바이든은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바이든과 민주당도 코로나19 피해를 이토록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사영화된 의료 체계를 만든 책임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트럼프와 사영화된 의료로 위험에 노출된 미국’). 전염병 대유행 6개월 동안 재산을 1000조 원 가까이 늘린 억만장자들, 사영화된 의료 체계에서 짭짤한 수익을 얻은 탐욕스런 제약 회사들과 의료 업체들이 앞다퉈 바이든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온건 시민단체들이 미국 대도시 10여 곳에서 (‘여성행진’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의 투표를 촉구하는 것은 후원했지만, 여성의 권리 수호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예컨대 낙태권 문제가 있다. 바이든은 낙태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민주당 후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누구도 지키려 들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도 한때는 자신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었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제정된 낙태 자격과 절차에 관한 수백 건의 규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그런 규제들이 노동자 서민 여성들의 권리를 공격하는데 말이다.

이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이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려는 미국 자본주의 · 제국주의 지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황이 트럼프의 계산대

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이는 (바이든과 민주당 덕이 아니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미국 대중의 반트럼프 정서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9일 현재 현재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에 3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 전체 투표의 22퍼센트에 이르는 숫자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중 트럼프에 투표했다고 밝힌 사람은 빛 중 하나 꼴이다. 반면 57퍼센트가 트럼프에 반대해 투표했다.

특히 흑인들의 투표 참가가 두드러진다. <워싱턴 포스트>는 “흑인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이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라 여기”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투표소 앞에서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몇몇 유권자들은 [버락 오바마가 처음 당선한] 2008년 대선보다 이번 선거를 더 엄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것이 곧 트럼프가 패배하리라 낙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위험성은 넓은 층을 포괄할 “대중성”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부분을 결집시키는 데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2016년 대선 결과도 돌이켜볼 만하다. 보름 앞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곱절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친기업 · 친제국주의 전사 클린턴은 대중의 변화 염원을 결집시키는커녕 실망만 잔뜩 주고 전통적 표밭을 상당히 잃었다. 그 점에서 바이든도 클린턴과 다를 것 없는데, 오죽 대중에 영감을 주지 못하면 심지어 (트럼프 4년을 겪었는데도!) 어떤 곳에서는 지지를 격차가 한 자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첨예해진 상황 때문에, 선거의 향배가 어떻게 되든 심각한 쟁투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화약고 같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벌이는 불장난이 위험한 연쇄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기관총 들고 반(反)트럼프 투표자들을 위협하는 극우파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신정환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공짜 노동’ 수행, 특수고용·단기계약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과 권리 박탈 등 온갖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얹혀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견됐음에도, 택배사와 정부는 책임을 외면하고 약속한 대책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난 9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를 보면, 택배 노동자들은 주

당 평균 71.3시간을 일한다. 주 52시간을 훌쩍 뛰어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 노동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은 분류 작업(근무시간의 43퍼센트)인데, 배달 수수료만 임금으로 받을 뿐 분류 작업은 아예 ‘공짜 노동’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늦은 밤, 심지어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다. 10월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노동자는 당일 아침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나가며 아버지에게 “오늘은 더 늦을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배달하던 차량에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10월 12일 사망한 한진택배 노동자는 숨지기 나흘 전 동료에게 “어제도 집에 도착 [새벽] 2시, 오늘 [새벽] 5시 ...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분류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추석 전 분류 작업 거부를 예고했었다. 택배사

와 정부는 분류 작업 등에 인력 충원을 발표했다.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에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투입한 인력은 360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택배사들의 말만 믿고 실질적으로 감독하기를 외면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피로가 누적된 데다 추석 기간 폭증하는 물량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자 훨씬 힘든 상황에 처했다.

지키지 않은 인력 충원 약속

10월 20일 “억울합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로젠택배 노동자의 사례는 ‘무늬만 사장’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여실히 보여 준다.

고인은 유서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구입에 전용번호판(구입까지, 그러나 현실은 ... 차량구입 등 투자한 부분이 있음에도 적은 [배달] 수수료에 세금 등 이것저것 빼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하고 절규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택배 노동자들의

월 순소득은 234만 원에 불과하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대리점 수수료, 차량 구입비와 관리비, 각종 업무 관련 경비 등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택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한다. 임금인 배달 수수료는 십수년간 동결된 상태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커녕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택배업계 1위이자 올해 5명이나 사망한 CJ대한통운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책과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예외 없이 즉각 적용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

만, 정부는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주들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보험료 납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도 미온적이다.

10월 들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죽음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자, 정부와 택배사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택배사는 전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노동자 사망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택배사가 내놓은 대책들이 알맹이가 없거나 미흡한 개선책조차 공문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는 것을 당장 막으려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분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구멍 송송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한다. 현행법은 이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기업주들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꼼수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제대로 설명도 없이 일단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많다. 취직과 동시에 적용 제외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아 노동자가 거부하기 힘들다.

실제로 올해 입직(신규 고용) 신고된 특수고용 노동자 53만 2797명 중 80퍼센트인 42만 4765명이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충분한 데다 신속하지도 않다. 특고 노동자 중 택배나 배달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에서 업무량이 폭증한 분야라서 인력충원 등 종합 대책이 시급한데 말이다. 정부의 대책은 두 축이다. 하나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는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특고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지 여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제외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 귀

책 휴업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런 정부의 방향성에 발맞춘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 방안을 이미 국토부가 내놔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용 제외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이 조차도 추진하지도 않다가 주섬주섬 다시 꺼내든 것이다.

게다가 적용 제외가 살아 있는 한 기업주들은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적용 제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대필 신청, 입직 미신고(고용 미신고)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하려 한다.

게다가 노웅래 안은 두 가지 사유 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에서 사

유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적용제외를 아예 삭제하는 안을 발의했다. 지역구가 얼마 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전북 정읍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그러나 이 안을 여당이 진지하게 다룰지는 회의적이다. 윤준병 자신이 노웅래 안 발의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돼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속성 기준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한다. 노웅래나 윤준병 안 모두 이 전속성 기준은 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전속성 기준 폐지가 아니라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정한 “특수성”을 기준으로 또다시 특고 노동자 사이에서 적용 대상이 갈릴 수

있다.

노동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반 소득·업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산재 적용 기준을 두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나 경우 실제로 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고작 13명뿐이었다(2020년 5월 기준).

최근 플랫폼 배달 기업인 쿠팡이츠가 배달 노동자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전속성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밝혀서 가입 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특고 산재보험 확대를 말하지만 이처럼 그 실상은 별 볼일 없다.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 즉 적용 제외와 전속성 기준 폐지, 100퍼센트 사용자 보험료 부담 등이 실행되려면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양효영